

노동포커스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간 노동리뷰

2024년 2월호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정책의 방향

김 근 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급격한 저출산·초고령사회의 도래) 등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시간의 규율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근로시간 규율에 관한 주요 방향은 획일적·강행적인 노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규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에 관한 시장 주도형 제도, 그리고 근로시간 규율의 다원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전환기의 노동정책논의를 살펴보면, “기존의 낡은 틀을 버리고, 새로운 큰 틀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체계 전환을 제안하는 전 단계에서, 주로 현행 노동관계법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방식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강학(講學)상 논의들은, 현실의 정책에서 다루어질 때 근로시간의 전체적 구조를 바꾸는 ‘전체적·체계적 접근법’이 취해지기보다는, 노사의 대립을 전제로 일부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적·개별적 접근법’이 나타나기 쉽다.

‘근로시간과 휴식제도’는 노동규율의 초창기부터 노사의 쟁점이 되어 왔던 전통적인 근로조건으로, ‘노동인권적 속성’과 ‘기업의 인력운영 규제’라고 하는 상반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노동법의 태동 시점부터 지닌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도태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선, 여전히 장시간근로 국가인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근로시간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keunju@kli.re.kr).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노사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근로시간법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건강과 시간 주권의 보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용자의 인력 운영상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효과적인 개별 제도의 도입은 물론, 우리 노동현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논의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와 같이 제도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덧붙이기식' 개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연차휴가의 경우, 취득과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연차휴가 취득률과 같은 근본 제도의 개선 없이 보충적인 제도들만 도입하여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 역시, 제도 개편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KLI**